

# 중장기 외교안보 전략의 과제

제1장

김상배

## I. 머리말

해방 이후 지난 7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오늘날 한국의 국가적 위상이 크게 높아졌음을 실감하게 된다. 한국은 2010년 현재 군사비 세계 12위, GDP 세계 15위를 달성하여 물질적 국력이라는 면에서 대략 세계 10-15위권을 차지한 중견국(中堅國, middle power)으로 평가된다. 2012년 6월에는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국민소득 2만 달러와 인구 5천만 명을 넘어선 나라들의 대열인 이른바 '20-50클럽'에도 진입하여 개도국의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던졌다. 국가 브랜드라는 측면에서도 이제 한국은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의 이미지를 세워나가고 있다. 이밖에도 IT나 인터넷 분야

에서 이룩한 한국 기업들의 성공이나 TV드라마와 K팝을 앞세운, 이른바 한류(韓流) 열풍도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엿보게 하는 사례들이다. 이렇게 커진 국력을 바탕으로 한국은 최근 글로벌 거버넌스의 다양한 분야에서 중견국으로서의 외교적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Kim, 2014a; 김상배 편, 2015).

향후 한국의 중견국으로서의 물질적 국력과 외교적 위상은 얼마나 더 지속될까? 이를 가능할 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국력의 잣대인 인구를 보면, 앞으로 한 세대인 30년이 관건이다. 2012년에 접어든 인구 5천만 명 시대는 2030년의 인구 5천2백만 명을 정점으로 하여 그 이후에는 점점 더 감소 추세에 접어들어 2045년에는 다시 5천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한국은 앞으로 30년 동안만 5천만 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한 국가로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될 것 같다. 경제력이라는 차원에서도 2030년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30년경에는 0.55%를 기록하여 사실상 성장을 멈추는 단계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2010년대 중반에 획득한 20-50클럽 멤버로서의 중견국 지위는, 앞으로 마냥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30년 정도만 유지될지도 모른다. 2015년의 한국에게는 앞으로 30년 동안만 기회의 창이 열려 있는 셈이다.

한반도 주변정세와 세계정치 환경의 변화라는 측면에서도 향후 30년은 중견국 한국에게 도전의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부상에 따라 향후 30년 동안 동아시아 권력구조의 변환이 급격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2021년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전면적 소강사회' 완성을 국가발전 목표로 내걸고 미국과 중국의 GDP 역전을 노리고 있다. 건국 100주년을 맞이하는 2049년에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통해서 미·중 패권교체의 꿈을 꾸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향후 30

년을 전후하여 새로운 패권의 시대가 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지구화, 정보화, 민주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전통적인 군사안보나 정치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난제들이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태생적으로 초국적인 성격을 띠 뿐만 아니라 그 영향도 글로벌한 차원에 미치기 때문에 소수 강대국들만이 나서서 해결하기에는 벽찰 정도로 복잡하다. 향후 30년 동안 이들 분야에서 중견그룹 국가들의 역할이 더욱 더 기대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중견국 한국은 앞으로 30년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 이 글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한국의 중장기 외교안보 전략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이론적 시각에서 짚어보았다. 특히 이 글은 최근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네트워크 이론<sup>1</sup>을 국제정치학 분야에 원용하여 이론틀을 개발한, 이른바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러한 고민을 풀어갔다. 기존 국제정치이론이 근대 국민국가 행위자들이 벌이는 자원권력의 게임을 분석했다면,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은 오늘날 지구화, 정보화, 민주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질적 변환

1 이 글에서 원용하는 네트워크 이론은 그 인식론이나 방법론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이다. 네트워크 개념과 이론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이들 연구가 주안점으로 삼고 있는 네트워크의 층위도 조금씩 다르다. 이러한 문제는 네트워크라는 것이 하나의 고정된 실체로서 파악되는 종류의 개념이 아니라는 특징 때문에 발생한다. 사실 어느 시점과 각도에서 관찰하느냐가 네트워크의 개념을 이해하는 변수가 된다. 다시 말해 분석적 층위를 어디에 고정시키느냐에 따라서 네트워크라는 존재는 유동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여러 가지 분류가 있겠지만, 이 글은 국제정치학에 주는 의미를 염두에 두면서 기존의 네트워크 이론을 네트워크 조직 이론, 소셜 네트워크 이론, 행위자-네트워크 이론 등의 세 가지 진영으로 나누어서 이해하고 이들을 복합적으로 원용하였다. 이러한 복합 네트워크 이론을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제시한 논의로는 김상배(2014) 제1장 참조.

을 겪고 있는 새로운 국가 행위자로서 '네트워크 국가'들이 벌이는 '네트워크 권력'의 게임으로 분석한다.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이 그려내는 세계정치는 '국가 간 정치(inter-national politics)'로서 국제정치(國際政治)라기보다는 '네트워크 간의 정치(inter-network politics)'로서 망제정치(網際政治)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논의가 향후 중견국 한국의 중장기 외교안보 전략을 가늠하는 데도 크게 유용하다는 것이 이 글의 판단이다.<sup>2</sup>

이러한 이론적 시각을 바탕으로 하여 이 글은 한국의 중장기 외교안보 전략이 추구해야 할 세 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글의 II-IV에서는 이러한 과제들과 관련된 이론적 논제와 경험적 사례들을 다루었다. 첫째, 한국의 중장기 외교안보 전략은 글로벌 및 동아시아에서 형성된 복합구조의 속성을 파악하고 그 안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구조적 위치'를 제대로 이해하여 적절히 활용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둘째, 한국의 중장기 외교안보 전략은 부국강병을 위한 자원권력의 추구전략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 및 동아시아에서 형성되는 복합구조 속에서 작동하는 '네트워크 권력'의 다차원적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끝으로, 한국의 중장기 외교안보 전략은, 과거 외교안보 전략의 전제가 되었던 개도국의 협소한 국가이익 규정이나 근대 국민국가의 모델을 넘어서, 새로이 변화하는 세계정치의 환경과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고려한 열

2 네트워크 이론을 국제정치의 이론과 현실에 적용한 사례로는 Hafner-Burton, Kahler and Montgomery (2009), Kahler, ed.(2009), Maoz(2010), Nexon(2009), Goddard(2009) 등을 참조. 그런데 이들은 주로 소셜 네트워크 이론의 논의를 인용하고 있다. 이들 미국 학계의 시각과는 달리 네트워크 조직 이론이나 행위자-네트워크 이론 까지도 포함하는 복합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에서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을 모색한 사례로는 김상배(2014) 참조.

린 국익의 발상과 '네트워크 국가' 모델을 추구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요컨대,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시각을 원용하여 살펴볼 때, 한국의 중장기 외교안보 전략은 앞으로 30년에 걸쳐서 그 진면목이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부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 II. 복합 세력망의 구조적 공백 찾기

한국의 중장기 외교안보 전략은 글로벌 및 동아시아 차원에서 형성되는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구조 및 참여 행위자들의 성격과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그 안에서 한국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 글에서 네트워크 이론을 원용하여 말하는 '구조'의 개념은 기존 국제정치이론에서 논하는 '구조'와는 다르다. 자원권력 게임의 양상을 넘어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관여하는 21세기 세계정치에서 신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이 말하는 세력분포로서의 '구조'나 또는 세계체제론이 말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와 같은 지정학적 구조라는 관점에서만 '구조'를 이해할 수는 없다(Waltz, 1979; Wallerstein, 1974). 국가 행위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비국가 행위자들이 다양한 이슈영역에서 기존 국가의 경계를 넘나들며 형성하는 관계의 구조를 적극적으로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이 주목하는 구조는 행위자들 간의 관계구조(relational configuration) 또는 상호작용 자체의 패턴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구조에 권력 변수를 추가해서 이해하면, 현실주의가 말하는 세력균형(Balance of Power, BoP)과 대비하는 의미에서

‘세력망(Network of Power, NoP)’이라고 명명할 수 있겠다. 중장기 외교안보 전략을 모색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세력망으로서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이 글의 주장이다.

특히 중견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세력망의 구조에서 어떠한 ‘구조적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중견국(中堅國)이라는 말에서 중심이라는 의미의 ‘중(中)’자와 함께 쓰인 ‘견(堅)’자는 이 글에서 논하는 ‘구조적 위치’의 뜻을 품고 있다. 형성문자인 ‘견고할 견(堅)’은 신하(臣)가 두 손을 마주잡고(又) 땅(土) 위에 굳건히(堅) 서 있다는 뜻이다. 이는 왕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부동의 자세를 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땅에 엎드린 일반 백성이나 높은 단위에서 자유로이 움직이며 왕을 보좌하는 측근들과는 구별되는 직책의 사람들을 의미한다. 실제로 중견은 고대 사회에서 최고 지휘자가 있는 부대(中軍)에서 최고 지휘자를 호위하는 사람(중견 무사 또는 중견 관료)을 의미했다. 중견은 지도자(또는 그 측근)도 아니고 백성도 아닌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나 언어가 영향을 받는 인사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중견국은 패권국도 아니고 약소국도 아닌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외교적 역할에 영향을 받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김상배 편, 2014, p.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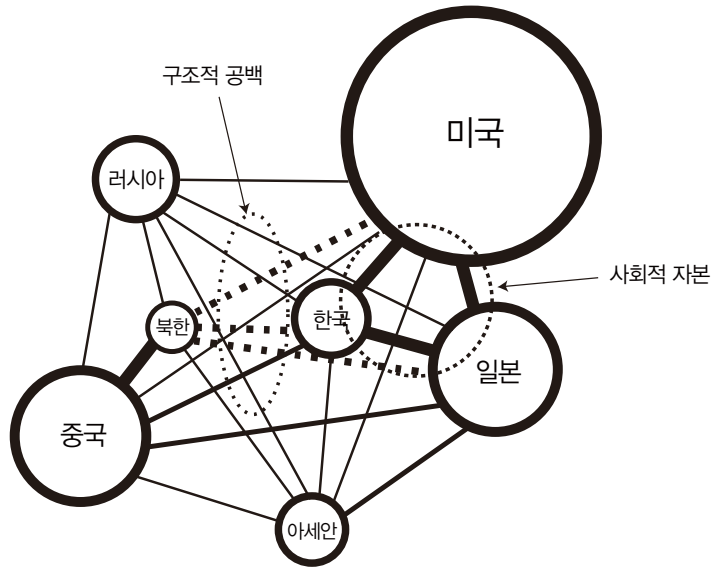
전체 네트워크의 세력망 구조에서 위치를 파악하는 능력은 중견국뿐만 아니라 세계정치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자들이 길러야 하는 능력일 것이다. 이러한 능력은 네트워크상에서 행위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권력자원의 분포, 과학·기술·지식의 보급과 활용 현황, 행위자들 간의 관계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흐름, 네트워크의 저변에 흐르는 문화적 맥락의 차이 등을 파악하는 복합적인 외교능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현재의 세계질서는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으며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 군사력과 경제력을 포함

한 각종 자원의 분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주변 국가들의 세력관이나 연결망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외교능력을 조지프 나이(Joseph S. Nye)는 상황을 파악하는 지적인 외교능력이라는 의미에서 ‘상황지성(contextual intelligence)’이라고 개념화하였다(Nye, 2008).

이러한 상황지성은 중견국이 중장기 외교안보 전략을 추구함에 있어서 구비해야 할 중요한 요건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강대국과는 달리 중견국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나아가 세계정치 세력망의 구조와 빈틈을 읽어내고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외교지(外交知)를 구비하는 능력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된다. 예를 들어, 강대국의 입장이 아닌 한국에게는 한반도 주변에 형성된 세계정치의 네트워크가 그저 중립적인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외교적 운신의 폭을 제약하는 하나의 ‘권력구조’로 작용함을 명심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상황지성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으로부터 파생되는 중요한 위치를 찾아내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중견국 한국에게 상황지성은 네트워크의 구조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파악하는 지성, 즉 ‘위치지성(positional intelligence)’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다(김상배, 2014).

위치지성의 시각에서 볼 때, 전체 네트워크에서 ‘위치’를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의 전체 구도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빈틈’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네트워크 이론에서 이러한 틈새는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s)’이라는 개념으로 연구되어 왔다(Burr, 1992). 구조적 공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를 메움으로서 새로운 역할과 가치의 창출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네트워크상의 구조적 공백을

〈그림 1-1〉 동아시아 세력망의 가상도



출처: 하영선·김상배 편(2010), p.80에서 응용.

찾아서 배우거나 활용함으로써 자신이 차지하는 위치의 전략적 가치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틈새를 찾는 것과 더불어 네트워크상에서 상대적으로 밀집되고 중복된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부분, 즉 일종의 ‘배후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데, 이는 일찍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라는 개념으로 알려져 왔다(Putnam, 1993). 이러한 구조적 공백이나 사회적 자본을 찾기가 구조적 위치 파악에 대한 논의와 연결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이들이 네트워크상에서 이미 ‘실재’하기보다는 행위자들이 네트워크를 치는 과정에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 1-1〉은 이상에서 살펴본 상황지성과 위치지성을 바탕으로 추구되는 구조적 공백의 공략과 사회적 자본의 활용

에 대한 논의를 가시화하기 위해서 그려본 동아시아 세력망의 가상도다.<sup>3</sup>

여기서 관건이 되는 것은 이러한 공백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그러한 구조적 공백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의 문제이다. 사실 이에 대한 답은 이론적 작업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의 구체적 사례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얻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최근 한국의 중견국 외교에 대한 기대의 증대는 추상적인 논의에서 출발했다기보다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구체적인 이슈영역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구조적 위상의 변화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좀 더 멀리 보면, 1990년대 초중반 이래 캐나다, 호주 등과 같은 국가들의 중견국 외교에 대한 기대가 상승한 것도 글로벌 차원에서 형성되는 이슈구조의 변환을 배경으로 한다. 글로벌 경제질서 운용이나 환경 거버넌스 수립, 비핵화 노력, 빈곤·기아·식량 분야의 기여 등과 같은 분야에서 중견국 외교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장으로 거론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기된 개념이 틈새외교(niche diplomacy)인데, 이는 중견국이 글로벌 거버넌스의 이슈구조 전 영역에 걸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자신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특정 영역을 선택하여 집중하는 외교전략을 의미한다.

사실 초국적으로 위협이 발생하는 신홍안보 분야는 강대국들의 국제협력 메커니즘만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즉 기성 국제질서의 구조적 공백이 존재하는 대표적 분야이다. 최근 들어 한국의 중견국 외교도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글로벌 경제질서의 재편, 개발협력, 원자력 안전, 사이버안보 등과 같은 영역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지속

3 〈그림 1-1〉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김상배(2014) pp. 372-374 참조.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였으며, WTO, OECD, APEC 등에서의 국제 경제규범 형성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2010년의 서울 G20 정상회의, 2011년 부산 개발원조총회 등도 좋은 사례인데, 두 회의에서 모두 각각 '서울 액션플랜'과 '서울 개발 컨센서스' 등의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또한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주최하면서 핵테러 방지 위한 '서울 커뮤니케' 채택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2013년 서울 사이버공간총회에서는 사이버 이슈 분야 글로벌 거버넌스 메커니즘의 준비에 노력하였다(Kim, 2014b).

그런데 여기서 하나 유의해야 할 점은, 이렇게 글로벌 거버넌스의 이슈 구조에서 발견되는 공백과 위치에 대한 논의를 전통 지정학에서 말하는 권력구조 개념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무리 글로벌 거버넌스의 장에서 벌어진다고 해도, 중견국 외교안보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통 지정학에서 말하는 지역적인 차원의 권력구조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네트워크 구조를 활용하는 중견국 외교안보 전략의 저변에 강대국들이 형성하는 지정학적 권력구조가 밑그림으로 깔려 있기 마련이고, 따라서 기존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적절히 설정하는 것은 여전히 중견국 외교안보 전략의 중요한 관건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최근 한국의 중견국 외교안보 전략에서도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이라는 해륙국가 간 세력전이의 구조 속에서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의 문제가 쟁점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지정학 구조에 대한 논의에만 갇혀서는 21세기 한국이 당면한 외교안보 전략의 해답을 찾기 어렵다는 사실 또한 직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자원권력을 갖대려 하여 벌어지는 지정학 구조의 권력게임

에서 중개자의 입지를 설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2000년대 중반 노무현 정부 시기 동북아시아의 지정학 구조를 염두에 두고 제기되었던 '동북아 균형자론'의 전철이 바로 그 사례이다. 당시 동북아 균형자론은 19세기 국제정치의 세력균형의 밑그림을 바탕으로 두고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는 것으로 그려졌는데, 이는 기존의 한-미동맹과 경쟁하는 관계로 인식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동북아 균형자론은 증대된 국력에 걸맞은 한국 외교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려는 노력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평가할 수 있지만, 새롭게 펼쳐지는 21세기 세계정치의 본질을 입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선부른 시도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결국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중장기 외교안보 전략은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구조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이슈구조가 겹치고, 전통안보 이슈와 신형안보 이슈가 중첩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복합 세력망의 구조를 활용하는데에서 그 활로를 찾아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전통 지정학의 시각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서는 비판 지정학이나 비(非)지정학, 탈(脫)지정학의 논의도 포괄하는 '복합 지정학(complex geopolitics)'의 발상을 바탕으로 한다.<sup>4</sup> 이러한 복합구조에서 발견되는 구조적 공백을 공략하는 중견국 외교안보 전략은 그 나라의 전반적인 자원권력과 특정 이슈영역에서의 외교력 간의 편차를 교묘하게 활용하는 능력에 성패가 달려 있다. 예를 들어, 지리적으로 근접

4 최근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도전에 따라 지정학의 부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국제정치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지정학의 부활을 논한 작업으로는 Mead(2014), Ikenberry(2014), 지상현·콜린 프린트(2009) 등을 참조. 이러한 논의의 연속선상에서 본 복합 지정학에 대한 문제제기로는 김상배(2015)를 참조.



한 지역에서 자원권력을 바탕으로 형성된 지정학 구조의 경직성은 중견국에 제약요인으로 작동하겠지만, 그러한 지정학 구조가 지역 차원을 넘어서는 글로벌 이슈구조와 중첩된다면, 그리하여 기존의 지역 구조가 지닌 경직성을 부분적으로나마 완화시킬 수 있다면 일말의 기회요인을 창출할 수도 있다. 중견국의 입장에서 볼 때, 기능주의적 차원에서 글로벌 연계성을 갖는 지역 차원의 이슈구조를 해결하는 경험들을 쌓음으로써 오히려 지정학 구조 차원의 고질적 난제들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 Ⅲ. 중개-연대-설계의 네트워크 전략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에서 본 중장기 외교안보 전략은,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이 처방하는 바와 같이 자원권력을 증대하는 전략이 아니라, 네트워크상에서 작동하는 권력 메커니즘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네트워크 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실주의가 염두에 두고 있는 권력 개념은 주로 국제정치의 핵심 노드인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물질적 자원, 특히 부국강병을 보장하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의 보유라는 관점에서 파악된다. 그러나 21세기를 맞아 변화하는 세계정치의 맥락에서 이해되는 권력 개념은 행위자의 속성론이나 자원론의 관점에서 파악하기보다는 행위자들이 형성하는 관계의 맥락에서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네트워크 이론에서 주목하는 권력은 노드로서의 국가 행위자의 속성이나 보유자원에서 비롯되는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노드와 노드들이 맺는 관계의 구조라는 맥락에서 생성되는 '네트워크 권력'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권력의

시각에서 이 글은 한국이 앞으로 30년 동안 추구해야 할 중장기 외교안보 전략의 방향으로서 중개와 연대 및 설계의 네트워크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 1. 중개의 네트워크 전략

첫째, 중장기 외교안보 전략은 주변 행위자들의 관계를 조율하는 중개 전략이다. 앞서 설명한 구조적 위치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이유는 이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의 과정에서 이른바 위치권력(positional power)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 국제정치의 역사를 보면, 중개에서 비롯되는 위치권력은 강대국에 기대되는 역할이었다. 그러나 네트워크 시각으로 보면,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리고 어떠한 구조적 위치를 점하느냐에 따라서 중견국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구조적 공백, 즉 네트워크상에 존재하지만 당사자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독특한 형태의 빈틈을 남보다 앞서 공략하는 것은 중견국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만약에 자신들이 아니면 단절되어 있을, 행위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빠진 링크', 즉 구조적 공백을 메움으로써 네트워크의 작동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면, 아무리 덩치가 작은 나라에서도 그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견국이 수행할 중개의 네트워크 전략과 관련하여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대칭적 중개'의 역할이다. 이는 기존에 존재하는 관계구조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그 관계의 상호작용성을 원활하게 하는 일종의 거래적 중개(transactional brokerage)라고 할 수 있다. 대칭적인 관계 사이에서 거래적

으로 중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전체에 질적인 변화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개의 역할이 요구되는 부분은, 소셜 네트워크 이론에서 말하는 ‘구조적 공백’이라기보다는, 단순한 빈틈 즉 일종의 ‘기능적 공백’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는 중개의 역할은 단순히 정보의 흐름을 중개하는 ‘연결자’나 의미의 흐름을 이어주는 ‘전달자’ 등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김상배, 2014, pp. 265-267).

그런데 중장기 외교안보 전략에서 좀 더 기대를 모으는 부분은 ‘비대칭적 중개’다. 이는 그야말로 구조적 공백을 메움으로서 네트워크상의 흐름이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행위자들 간의 관계구조에 변화를 가져오는, 따라서 각 행위자들의 이익의 구도를 넘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변환적 중개(transformative brokerage)를 의미한다. 이러한 변환적 중개에서는 단순한 정보의 흐름이 아닌 의미의 흐름을 중개해야 하는 ‘번역’의 과정이 필요하기도 하다. 사실 현재 한국이 동아시아 지역 차원에서 당면하고 있는 중견국 외교의 현실은 바로 이러한 변환적 중개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한국은 글로벌 패권국으로서의 미국과 지역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중국 사이에서, 이러한 지정학적 구조와 글로벌 이슈구조의 사이에서, 그리고 개도국의 이익구조와 선진국의 패권구조 사이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동서양의 서로 다른 문명코드 사이에서 비대칭적이면서도 변환적인 중개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sup>5</sup>

5 이러한 비대칭적 중개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한국의 중견국 외교와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는 유형은 이른바 ‘평행 중개(parallel brokerage)’이다. 이는 애플의 매킨토시 컴퓨터에서 애플 운영체제 위에서도 윈도 운영체제를 구동시킬 수 있게 도와주는 응용 프로그램인 패럴렐 데스크톱(parallel desktop)의 기능에서 유추해서 명명하였다. 평행 중개는 다른 이름으로는 층간 중개(inter-layer brokerage) 또는

이러한 비대칭적 관계의 조율이 쉽지 않은 것은 새로운 관계를 맺는 과정이 기존 관계를 끊는 과정과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곤란한 문제는 ‘맺은 만큼 끊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다시 말해 어느 일방과의 관계 강화는 타방과의 관계 약화를 의미하기도 하고 새로운 관계 맺기는 기존의 관계 끊기를 야기한다. 또한 이러한 관계조율이 단순히 맺고 끊거나 구조적 공백을 메우는 정도에만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중개자의 역할이 네트워크 흐름의 호환성을 통제하는 변환자의 성격을 갖게 될 경우, 네트워크의 구조가 완전히 변화되거나 네트워크 게임에 관여하는 행위자들이 교체되는 일이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조율의 과정에서 일반이론을 세우기란 쉽지 않지만 적어도 한국 외교사로부터 교훈은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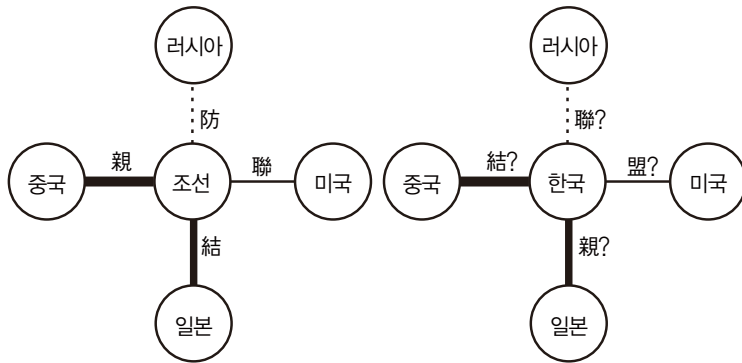
19세기말 일본 주재 청나라 외교관이 조선을 위해서 써주었다는 『조선책략』의 사례를 들어 보자. <그림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防)’ 위해서 중국과 ‘친(親)’하고 일본과 ‘결(結)’하고 미국과 ‘연(聯)’하라는 조언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친(親)-결(結)-연(聯)은 모두 다른 수준의 관계를 상징하는 비대칭적 연결망의 구축에 대한 주문이다. 한자의 뜻만 살펴봐도, 친할 친(親)은 ‘나무(木)가 포개어져 있는(糸) 것처럼 많은 자식들을 부모가 보살피는(見) 것과도 같은 관계’를 의미한다. 애정이 담길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맺을 결(結)은 ‘훌륭한 사람(士)의 말(口)을 실타래(糸)로 묶는 것과도 같은 관계’를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신뢰가

플랫폼 위에서의 중개(on the platform brokerage) 등으로 부를 수 있다. 이러한 평행 중개는 중견국 외교의 방향모색이라는 차원에서 유용한 개념인데, 앞으로 좀 더 추가적인 개념적 정교화와 경험적 사례의 발굴이 필요하다(김상배 편, 2015).



갈려 있는 관계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연이을 연(聯)은 마치 중국의 오래된 초상화에 그려진 인물처럼 ‘귀(耳)가 뺨에 잇닿아(絲) 있는 것과도 같은 관계’를 의미한다. 애정이나 신뢰를 전제로 하지는 않지만 기존에는 없던 관계를 새로이 만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렇듯 19세기말의 『조선책략』에서 제시된 청나라의 충고에는, 상이한 의미의 한자어들이 드러나는 바와 같이, 당시 조선이 주변 국가들과 맺어야 할 차별화된 관계의 성격을 담고 있었다.

〈그림 1-2〉 21세기 연(聯)-결(結)-친(親)-맹(盟)의 전략?



a) 19세기 조선책략

b) 21세기 한국책략?

그렇다면 21세기 한국의 외교전략에 대한 조언으로 『한국책략』을 쓴다면 어떠한 처방이 담길까? 이러한 처방에는 20세기 중반 이래 동맹(同盟)을 유지해온 미국과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될 것이다. 사실 동맹에서 맹(盟)이라는 말은 앞서 언급한 친(親)-결(結)-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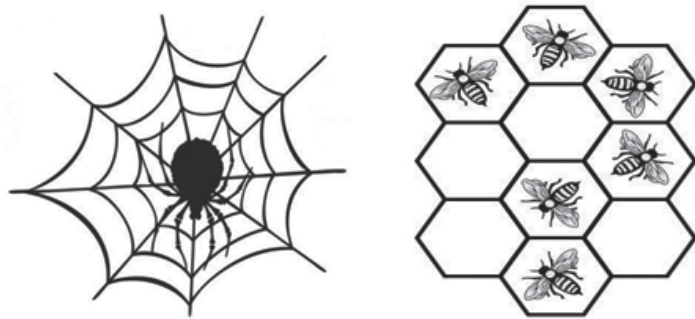
(聯)보다는 좀 더 친밀한 관계를 상징한다. 맹세 맹(盟)은 ‘그릇(皿)에 담긴 짐승의 피(血)를 번갈아 빨고 신에게 맹세하고 똑똑히 나타내어(明) 굳게 약속하는 일’의 뜻을 지닌다. 피를 나눌 정도의 단단한 관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21세기 연결망 외교의 관점에서 본 한국 외교의 과제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어떻게 조율할 것이며, 아울러 새롭게 부상하는 중국과는 어떠한 관계를 설정하고, 이러한 와중에서 일본이나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떠한 비중으로 조정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문제로 압축된다. 다시 말해 〈그림 1-2〉의 오른쪽 그림에 가설로 적은 것처럼 한반도 주변 4개국과의 관계를 조율하는, 21세기 버전의 ‘연(聯)-결(結)-친(親)-맹(盟)의 전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묻는 작업이 될 것이다.

## 2. 연대의 네트워크 전략

둘째, 한국이 중장기 외교안보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네트워크 연대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구조 하에서 어느 중견국이라도 혼자 나서서 효과적인 성과를 얻어내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중견국 전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생각을 공유하고 행동을 같이하는 동지국가(同志國家, like-minded country)를 최대한 많이 모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구조적 공백을 메우려는 중견국의 역할이 궁극적으로 성공하는 길은 남들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행위자들을 자국 주위에 모을 수 있느냐에 달렸다. 다시 말해 중견국 전략의 핵심은 이질적인 행위자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힘의 확보에 있다. 〈그림 1-3〉에서 묘사한 바와 같이, 강대국의 네트워크 전략이 혼자서 거미줄을 치는 거미의 전략에 비유

된다면, 중견국의 네트워크 전략은 흔히 여럿이 함께 벌집을 짓는 꿀벌들의 전략에 비유될 수 있겠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렇게 세(勢)를 모으는 권력, 즉 집합권력(collective power)이 형성되는 메커니즘이 오늘날 세계 정치에서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통 국제정치의 경우에는 주로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하드파워(hard power) 자원에 의거했다면, 최근에는 지식, 문화, 이념 등을 통해서 상대방을 끌어들이고 설득하는 소프트파워(soft power)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Nye, 2004).

〈그림 1-3〉 거미줄 치기와 벌집 짓기



사실 여럿이 모여서 힘을 합치는 세 모으기는 세계정치의 기본이다. 근대 국제정치에서도 연합이나 동맹 및 제휴 등의 형태로 집합권력에 대한 관념이 존재했다. 힘과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는 것은 생리이다. 또한 힘이 약한 나라들이 힘을 키워서 자신들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서로 연합하거나 제휴하고 동맹을 맺는 일은 국제정치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세를 모으고 내 편을 만드는 외교는 국제체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원리로서 세력균형이라는 개념으로 이

해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권력자원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가의 여부가 세를 모으는 국제정치 게임의 잣대가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집합권력의 논의는 근대적인 의미에서 본 하드파워 기반의 자원권력에 대한 논의와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

그러나 최근의 집합권력에 대한 관심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를 모으는 근대적 발상을 넘어 형성되는 측면이 강하다. 예를 들어 하드파워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단순히 위협하고 강제하는 방식을 넘어서 소프트파워 자원을 바탕으로 하는 보상과 설득 및 협력의 방식으로 세를 모으는 전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다시 말해 네트워크의 세를 형성하는 집합권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밀어붙이는 완력(腕力)이나 실력(實力)보다는 끌어당기는 ‘매력(魅力, attractive power)’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등장하였다. 매력의 사전적 의미는 상대방의 마음을 호리거나 상대방의 머리를 납득시켜 내 편으로 만드는 힘이다(평화포럼21 편, 2005).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보면 중장기 외교안보 전략에서 대내외적으로 매력을 발산하는 공공외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김상배·이승주·배영자 편, 2013).

한편, 이러한 세 모으기의 논리를 빌어서 작동하는 동지국가들의 연대 전략은 지역 차원에서 제도화된 정부간 협의체의 모습을 띠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글로벌 거버넌스의 장에서 동지국가들의 연대외교로 나타난다. 동지국가 외교에서 그 연대 효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공동의체의 발굴은 매우 중요한 관건이다. 최근 글로벌 차원에서 공동의체로 제기되는 분야인 개발협력, 기후변화, 사이버안보, 보건안보, 재난관리, 인도적 지원 등은 어느 한 국가 또는 소수 선진국들의 힘만으로는 풀 수 없는 초국가적 난제들이다. 최근 한국도 참여하고 있는 중견국 협의체인 미타(MIKTA)<sup>6</sup>는 이들 분야에서 중견국들이 주도하는 협의의 장을 열어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분야의 특징은 모두 공부하지 않으면 제대로 풀 수 없는 어려운 숙제들이라는 데 있다. 중견국 전략은 ‘구조적 위치’를 잘 잡아야 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이슈구조 하에서 중견국의 이익과 리더십을 반영한 ‘위치잡기’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중장기 외교안보 전략이 다양한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들이 참여하여 모두의 중지(衆智)를 모으는 ‘지식외교’를 지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3. 설계의 네트워크 전략

끝으로, 중장기 외교안보 전략이 염두에 두어야 할 또 다른 과제는 중견국으로서 나름대로의 세계질서를 구상하는 설계의 네트워크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점이다. 향후 30년 동안 한국이 추구할 중장기 외교안보 전략이 상정하는 세계질서의 모습은 지난날 냉전과 탈냉전기의 세계질서와는 다른 모습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장기 외교안보 전략은 기

6 미타(MIKTA)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의 머리글자를 따서 이름 붙여진 5개국 외교장관들의 비공식 협의체이다. 2012년 2월 시작된 이후 미타는 여러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면서 글로벌 거버넌스 분야의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다. 미타는 캐나다와 호주와 같은 전통 중견국 그룹이나 브릭스(BRICS)로 대변되는 신흥 중견국 그룹과는 구별되는, 이른바 제3세대 중견국 그룹이 주도하는 외교의 장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호주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세계질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나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할 의지와 역량의 관점에서 최근 새롭게 부상한 중견국들이다. 이들 국가들은 미타를 통해서 ‘창의적 동반관계’의 구축을 기치로 내걸고 이른바 동지국가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김상배 편, 2015).

존의 구상을 답습할 것이 아니라 21세기 세계정치 환경의 변환을 반영하는 새로운 세계질서의 밑그림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세계질서 전체의 판세를 읽고 나름대로의 프레임을 짜는 능력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중국몽(中國夢)’과 ‘아메리칸 드림’으로 대변되는 강대국들의 동상이몽 사이에서 한국은 ‘중견국의 꿈’을 제시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 어떻게 세계질서 또는 동아시아 질서의 프레임 짜야 주변 국가들이 동의할까? 여기서 관건은 한국이 과거 약소국의 경험에 갇히지 않고 중견국의 미래를 짚어내는 꿈을 꿀 수 있느냐, 그래서 남의 꿈을 대신 꾸주는 것보다 같은 설득력을 얻어낼 수 있느냐의 여부일 것이다. 이는 ‘중견 국가지(middle power intelligence)’를 발휘하는 문제인 동시에 ‘중견국 상상력(middle power imagination)’을 실행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중견국의 세계질서에 대한 구상은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제시되어야 할까? 현재 중견국의 입장이라는 것이 기존의 세계질서 운영과정에서 수동적으로 편입되는 약소국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강대국을 대신해서 판 전체를 새로이 구상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다. 사실 중견국이 세계질서에 대한 구상을 제시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오히려 세계정치의 제도과 규범, 그리고 철학적 목표와 가치를 제공하는 설계의 힘을 발휘했던 측은 강대국들이었다. 그러나 중견국이 세계질서 전체를 설계할 수는 없더라도 주어진 플랫폼 위에 부가가치를 늘리는 하위 설계자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은 떠올릴 수 있다. 다시 말해 중견국의 경우에도 강대국들이 설계한 플랫폼 위에 적절한 역할을 설정함으로써 시스템 자체가 원활히 작동하는 개선책과 보완책을 제시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체 프로그램의 설계자가 될 필요는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세 가지의 보완적 설계의 네트워크 전략을 제안한다.

첫째, 설계전략의 맥락에서 중견국이 추구할 수 있는 중장기 외교안보 전략의 아이টে모로는 '틈새외교'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중견국의 경우에는 강대국처럼 세계질서 전체를 설계하는 외교를 추구할 수는 없겠지만 강대국의 표준 플랫폼 위에서 기성 세계질서가 포괄하지 못하는 틈새의 프로그램을 메우는 외교안보 전략을 추구하는 것은 가능하고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2010년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인 한국은 세계 주요 국가들의 환율을 조정하는 프로그램을 관철시킬 수는 없었지만 새로운 개발 협력 이슈를 제기하는 역할은 수행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정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 고안되는 일종의 '하위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중견국의 외교안보 전략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중견국의 외교안보 전략은 기성 세계질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강대국이 간과하기 쉬운 틈새 응용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세계질서에서 중견국이 차지하는 특별한 위상은 강대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의 빈틈을 무조건 공격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빈틈을 메워주는 역할을 요구한다. 이러한 종류의 빈틈 메우기 전략이 가능한 것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네트워크를 백 퍼센트 장악하는 법은 없기 때문이다.

둘째, '접맥외교'도 중견국이 추구할 수 있는 설계의 네트워크 전략의 좋은 아이টে모이다. 접맥외교란 호환되지 않는 기존의 복수 표준들을 중개하고 복합하는 맥락에서 추진되는 외교를 의미한다. 사실 중견국의 설계권력은 독창적이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미 존재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수용하고 이를 복합적으로 엮어내는 소위 '메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휘될 수 있다. 메타 프로그램이란 엄밀하게 살펴보면 '내용' 차원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존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새로운 발상으로 융합하고 복합하였기 때문

에 '형식' 차원에서는 새로운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국이 20세기 후반에 이룩한 발전모델은 비슷한 경로를 추구하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전수할만한 '접맥모델'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사는 시장경제와 권위주의가 공존하는 개발도상국 모델로부터 시장경제의 성숙을 바탕으로 정치적 민주화를 달성한 선진국 모델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최근 학계에서는 전자의 개발도상국 모델을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Consensus)', 후자의 선진국 모델을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라는 개념으로 부르고 있다(손열편, 2007).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한국의 발전모델은 '서울 컨센서스(Seoul Consensus)'로 부를 수 있을 것인데, 이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입장을 연결해 주는 메타 프로그램 또는 접맥모델을 제시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한국의 독특한 발전경험을 원용해 보면 중견국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에서도 이에 비견되는 접맥외교의 프로그램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설계전략의 맥락에서 떠올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중견국 전략 아이টে모로는 기성 세계질서의 프로그램이 결여하고 있는 규범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규범외교'의 전략을 들 수 있다. 규범외교란 인류 공통의 규범이나 보편적 가치 등을 외교 지침으로 삼아 다른 나라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외교라고 할 수 있다. 규범외교는 무엇이 정상적(normal)인지 정의하여 국가의 행위패턴을 변환시키는 규범의 수립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설계권력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증진,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 등의 분야에서 벌인 유럽 국가들의 외교적 관념과 태도를 현대 규범외교의 대표적 사례로 간주하기도 한다. 상대적으로 군사력이나 경제력에서 약세인 중견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규범외교의 추구는 일정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규범외교의 전략은 기성 세계질서의 운영방식에 대한 대안적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강자 위주의 논리에 대해 어느 정도의 반론을 제기하는 효과가 있다. 다시 말해 물리력보다는 도덕적 힘에 호소하는 규범외교의 전략은 단순히 물리력의 분포를 위주로 형성된 강대국 주도 질서의 빈틈을 지적하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그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IV. 열린 국익 및 통일 모델의 추구

중장기 외교안보 전략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대외전략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이외에도 대내적으로도 한국이 추구할 국가모델의 성격, 즉 어떠한 형태의 국가인가 하는 존재론적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네트워크 이론이 제시하는 네트워크 행위자의 개념은 기존의 국민국가 행위자를 중심으로 보는 주류 국제정치이론의 전제를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신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에서는 주권과 영토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작동하는 위계적인 폐쇄체계(closed system)로서 국민국가를 주요 행위자로서 설정하였다. 이에 비해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은, 국가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지만, 기존의 국민국가가 그 경계의 안팎으로 변환되면서, 그 역할과 형태가 변화하는 개방체계(open system)의 형태를 띠는 새로운 행위자로서의 국가의 부상에 주목한다. 이러한 국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비국가 행위자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한다. 또한 <그림 1-4>에서 묘사한 바와 같이, 국가 그 자체도 더 이상 일사불란한 모습으로 움직이는 위계조직이 아니며, 국가기구 내의 여러 하위 행위자들의 수평적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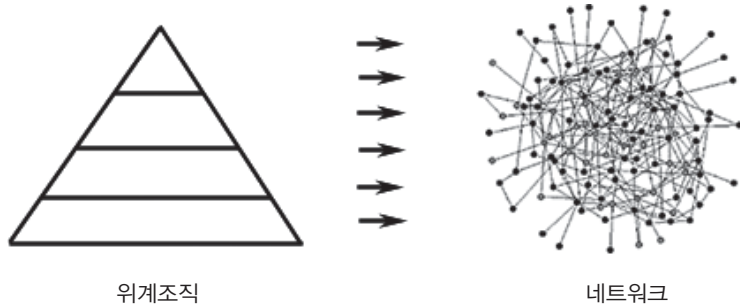
계가 활발해지는 조직형태로 변화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네트워크 이론에서 주목하는 국가는 '네트워크 국가'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국가에 대한 논의는 한국이 추구할 중장기 외교안보 전략이 전제로 하는 국가 모델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21세기 변환의 시대를 맞는 세계정치 환경 하에서 이제 개도국에서 중견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과거 국가 모델의 굴레를 넘어서 어떠한 성격의 국가를 지향하고 그 전제 위에서 어떠한 중견국 전략을 추구할 것이냐의 문제와 관련된다. 특히 이러한 중견국의 국가 성격의 문제는 중견국 전략의 방법과 원칙, 목표가 되는 국가이익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의 문제를 통해서 나타난다. 앞서 살펴본 구조적 위치론이 주로 밖으로부터 규정되는 중견국 한국의 대외적 역할과 정체성에 대한 논의였다면, 내부적 차원에서 중견국 한국이 추구할 국가이익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다시 말해, 국가이익 개념의 재규정 문제는 한국이 자리 잡은 구조적 위치에 대한 고민을 반영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중견국은 강대국이 추구하는 것과 같이 확장된 국가이익의 개념을 바탕으로 행동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개도국의 경우처럼 협소하게 규정된 국가이익의 개념에만 머물러 있을 수도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최근 한국이 처한 중견국의 입장을 보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이 협소하게 정의된 국가이익만을 추구할 수 없게 되었다. 사실 한국은 20세기 후반 근대화와 산업화의 추진 과정에서 국내적으로 협소한 국가이익을 추구해 왔다. 대외적으로도 개별국가 단위의 차원에서 본 국가이익의 추구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최근 개도국의 위상을 넘어서 중견국의 위치로 도약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기존의 국가이익에 대한 인식을 수정할 필요성과 당위성에 직면하였다. 중견국 한국은 종전과는 달



〈그림 1-4〉 위계조직에서 네트워크로



리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국가이익을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안팎으로 확장된 전략을 추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현 시점에서 적어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의 중장기 외교안보 전략이 ‘달린 국가이익론’이 아닌 ‘열린 국가이익론’을 바탕으로 모색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첫째,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볼 때, 한국의 중장기 외교안보 전략은 종전보다 좀 더 ‘부드럽게’ 국가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이는 군사력, 경제력 등과 같은 물질적 권력자원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밀어붙이는 힘, 즉 하드파워에 기반을 두고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패턴에서 탈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식, 이념, 외교와 같은 비물질적 자원을 바탕으로 하여 상대방을 설득하고 유인하고 회유하여 끌어당기는 힘, 즉 소프트파워를 활용하여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인식과 통한다. 더 나아가서 이는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교묘히 섞는 스마트파워(smart power) 전략의 채택을 의미하는데, 앞서 설명한 네트워크 권력의 추구전략에 대한 논의와 통한다. 사실 국제정치의 역사를 보면, 중견국인 나라들이 일정한 수준의 하드파워를 갖추게 되면, 즉 속성론에서 볼 때 국력이 중간

규모로 커지게 되면, 하드파워 외교의 패턴을 넘어서 소프트파워 외교에 관심을 갖는 경향이 나타났다. 최근에 공공외교나 한류와 같은 소프트파워 외교에 각별한 관심을 갖는 한국의 사례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볼 때, 한국의 중장기 외교안보 전략은 상호 간의 공동이익을 만족시키는 외교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별 국가이익의 일방적 추구를 넘어서 인식의 공유와 연대의 형성을 바탕으로 한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상호이익은 어느 국가가 지닌 내재적 속성의 유사성에서 비롯될 수도 있지만, 일군의 국가들이 글로벌 거버넌스의 이슈구조에서 유사한 구조적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발생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행위자들이 내재적으로 지닌 개별이익일 수도 있고 유사한 구조적 위치에 놓임으로써 생겨나는 집합이익일 수도 있다. 1990년대 이후의 캐나다, 호주와 같은 국가들의 중견국 외교에 대한 논의도 바로 이러한 상호이익의 개념을 바탕으로 전개되었는데, 무역이나 금융, 신항안보 분야에서 출현한 동지국가들의 연대전략이 거론되었다. 당시 중견국의 입장에서 볼 때, 물리적 공격에 의한 영토적 통합성에 대한 명시적 위협은 감소한 반면, 새로이 재편되는 글로벌 경제질서의 소용돌이 속에서 경제주권을 확보하는 문제나 초국적 이슈로 제기된 신항안보의 위협이 오히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인식이 그 배경이 되었다.

끝으로,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목표라는 점에서 볼 때, 한국의 중장기 외교안보 전략은 국제사회와 인류공동체의 보편적 규범에 부합하는 외교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익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실리외교를 넘어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규범적이고 도덕적으로 타당한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규범외교의 추구를 의미한다(전제성, 2012). 사실 이러한 중견국 외

교의 규범적 성향은 '계몽된 자기이익'에 대한 관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인도적 국제주의(humane internationalism)'로서 개념화된 바 있다(Pratt, ed. 1990).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이는 '착한(善) 외교,' 또는 '어진(仁) 외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글에서 강조하는 구조적 위치론의 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중견국의 규범외교는 행위자의 기질 자체에서 비롯되기보다는 그 나라가 놓여 있는 구조적 위치에서 생성된다는 점도 없지 않다. 다시 말해 중견국의 규범외교는 다른 나라보다 좀 더 도덕적이고 덜 이기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이 아니라 특정한 구조적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자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한국이 추구하고 있는 개발협력 외교, PKO 평화유지외교, 인도주의적 기여외교 등의 의미도 이렇게 구조적 위치에서 파악된 규범외교(즉 확장된 국가이익)라는 관점에서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한편 새로운 국가이익의 개념에 기반을 둔 중견국 외교의 추진은 대내적으로 이러한 국가이익의 재규정을 감내할 국내적 지지 기반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중견국 전략의 추구는 많은 경우 글로벌 거버넌스에의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비용을 지불할 국내적 합의와 지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구화 시대를 맞이하여 글로벌 이슈들이 국내체제에 미치는 영향이 늘어나면서 외교정책의 과정에 민간 및 시민사회 행위자들이 기여할 여지가 증가했다. 이러한 구도에서 특정 이슈 영역에서 중견국 규범외교의 실천이 국제적으로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특정집단에 피해를 줄 가능성 때문에 국내적 반대에 봉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견국 외교는 약소국 외교의 실리주의와 이에 익숙한 기존 여론의 극복을 과제로 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캐나다,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등과 같은

서방 중견국들의 출현은 이들 국가의 (사회)민주적 국내체제의 성격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견국 외교의 국내적 기원을 강조하는 시각은, 이 글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견국 외교에 대한 구조적 위치론의 주장을 보완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볼 때, 한국의 국민들은 '양보하고 기여하는 소프트파워의 중견국 외교'를 추진하기 위한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을까? 중견국의 국가이익이나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궁극적으로 중견국의 국가모델을 재조정하는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좀 더 넓게 보면, 중장기 외교안보 전략은 전통적인 근대 국민국가 모델의 연속이 아니라 21세기 세계정치의 새로운 국가모델, 즉 '네트워크 국가'의 부상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하영선·김상배 편, 2006). 네트워크 조직 이론의 시각에서 보면, 지구화, 정보화, 민주화의 시대를 맞이한 오늘날에는 국민국가와 같은 폐쇄체제의 국가모델이 아닌 개방체제의 모습을 따르는 열린 국가모델이 부상하고 있다. 게다가 앞서 제시한 소셜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에서 볼 때도, 21세기 세계정치에서 구조적 공백을 공략하는 중견국은 변환적(transformative) 외교를 펼치는 주체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중견국 전략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국민국가로서의 어느 중견국의 외교라는 차원을 넘어서 좀 더 열린 정체성과 국가이익에 기반을 둔 개방체제로서의 네트워크 국가가 추구하는 외교라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한편, 이상에서 펼친 네트워크 국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현재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 전략 문제 중의 하나인 한반도 통일 문제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궁극적으로 한국의 중장기 외교안보 전략에 대한 논의는 남북한의 통합, 그리고 더 나아가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네트워크 국가의 실험 등과 관련해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네트워크 이

론의 시각에서 한반도 통일을 논하는 경우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역시 기존의 노드의 발상을 넘어서는 통일론의 지평을 여는 일이다. 사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통일(統一, reunification)이라는 용어는 근대 국민국가라고 하는 노드 차원의 발상이 낳은 소산이다. 지난 70여 년 동안 우리가 논하고 있는 한반도의 통일이란 다름 아니라 남북한에 나뉘어 살고 있는 한민족이 국민국가라는 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즉 '통일(統一)'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한반도의 통일이란 19세기 후반 개항 이후 지난 백여 년 동안 우리 민족이 추구해왔던 근대 국민국가 건설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설정되어 온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한반도의 통일이 노드 차원에서 제기되는 목표인 것은 맞지만 그 목표가 노드 차원의 발상만으로는 풀 수 없는 '탈(脫)노드 차원의 과제'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한반도의 통일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야 할 '네트워크 차원의 과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한반도 통일전략의 방향은 '하나로 합치는 통일(統一)'의 전략이기보다는 '모든 곳으로 통하는 전통(全通)'의 전략, 즉 네트워크 통일의 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한반도 통일은 단순히 남북한의 단위 통합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한 통합을 중심에 놓고서 안팎으로 국내외의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네트워크 국가의 건설과제로서 이해된다.

통일 네트워크 국가의 달성을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네트워크와 함께 국내적 차원에서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사례만을 보더라도 최근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여론분열, 남남갈등 등이 효과적인 외교적 대응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 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정책과 정치적 소통체계를 총체적으로 재정비하고,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정부와 시민사회의 소통기제를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가 수세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지혜를 정책결정 및 실행과정과 연결시키고 이들을 이끌어 가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통일국가의 모델로서 네트워크 국가는 국가-비국가 행위자의 관계망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적인 네트워크의 등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네트워크 국가는 정부 간 네트워크의 활성화와 온오프라인 지구 거버넌스의 필요성, 그리고 국민국가 단위를 넘어서는 지역주의의 강화 등을 배경으로 출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이나 북미,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모색되고 있는 지역통합의 움직임은 국민국가 단위를 넘어서는 네트워크 국가의 부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다. 그러나 네트워크 국가의 등장은 각 지역별로 상이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한국의 통일 네트워크 국가는 동아시아 차원에서 진행되는 네트워크 국가와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

## V. 맺음말

지금 한국은 향후 세계정치의 변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그 위상 변화에 걸맞은 중장기 외교안보 전략을 모색할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새로운 외교안보 전략의 패러다임으로서 중견국 전략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존의 약소국과 개도국의 이미지를 넘어서는 동시에 국가 주도의 발전국가로서의 모델을 넘어서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국가모델과 외교전략을 모색하려는 실험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실험은 주로 동북

아시아의 지정학적 구도에 고착되어 온 공간 개념을 넘어서, 그리고 주로 미국에 편중된 강대국 중심의 대외관계를 넘어서 21세기 세계정치의 장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외교를 펼치는 작업으로 요약된다. 특히 최근 다양한 초국적 문제들을 놓고 벌어지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모색 과정에서 한국은 중견국 외교의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를 얻고 있다. 한국이 안고 있는 이러한 과제는 기존에 국제정치에서 중견국으로 거론되던 나라들이 안고 있었던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내용을 갖고 있다.

기존의 국제정치이론에는 새롭게 변화하는 21세기 글로벌 거버넌스의 과정에서 한국의 중장기 외교안보 전략을 논할 이론적 자원이 부족하다. 기존의 중견국론이 보유한 이론적 상상력을 가지고 변환의 시대를 맞고 있는 한국외교의 새로운 정체성과 국가모델 및 전략을 논하기는 벅차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통감하고 한국의 중장기 외교안보 전략을 이해하는 이론틀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서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시각을 원용하였다. 특히 이 글은 네트워크 이론의 논의로부터 구조적 위치론, 네트워크 권력론, 네트워크 국가론 등의 개념을 추출하여 활용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중장기 외교안보 전략론에서 한국외교의 정체성은 복잡 지정학의 시각에서 파악된 구조적 위치에서 비롯된 중견국 정체성으로 개념화된다. 이러한 구조적 조건과 자기 정체성을 부여받은 한국이 추구할 중장기 외교안보 전략의 향후 추진방향은 네트워크 권력게임의 복합적 추구로 설정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전략을 추구하는 중견국 한국은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국가모델의 재조정과 국가이익에 대한 재인식의 과제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첫째, 한국의 중장기 외교안보 전략은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차지하는 구조적 위치론으로 파악되는 중견국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여 추구되어야

한다. 기존의 국제정치이론가들이 중견국 외교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로 행위자의 속성이라는 변수에 주목했지만, 이 글은 네트워크에서 차지하는 구조적 위치라는 변수에 착목하여 중견국의 개념을 이해할 것을 제안하였다. 사실 기존의 속성론은 일정한 정도의 물질적 자원을 확보한 중견국의 자격을 거론하는 데는 유용하다. 그러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중견국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답할 수 없다. 따라서 중견국 외교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조적 위치의 관점에서 중견국을 정의하고, 더 나아가 그 구조적 위치로부터 어떠한 종류의 역할이 부여되는지를 탐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소셜 네트워크 이론에서 원용하는 위치권력의 개념은 분절된 네트워크에서 구조적 공백을 메우는 중개자의 역할을 엿볼 수 있는 이론적 자원을 제공한다.

둘째, 구조적 위치와 위치권력에 대한 논의는 중장기 외교안보 전략이 추구해야 할 좀 더 구체적인 네트워크 전략의 내용에 의해 보충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한국이 추구할 중견국 외교안보 전략의 요소를 네 가지 측면에서 지적하였다. 무엇보다도 중견국이 성공적인 네트워크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전제는 주변 네트워크 구조를 이해하고 그 상황에서 적절한 위치를 설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네트워크 내에서 발생하는 행위자들 간의 비대칭적 관계를 슬기롭게 조율하는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중개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세계 도처로부터 지지 세력을 끌어들이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행위자들과 물질적 조건들을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네트워크 전략을 추구하는 와중에 중견국 한국은 설계자의 목표도 병행해서 추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설계자의 역할은 시스템 전체를 설계하기보다는 강대국이 운영하는 시스템에 유용한 보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하위 설계자의 역할에

가까울 것이다.

끝으로, 한국의 중장기 외교안보 전략은 국력위상의 상승과 대내적 적응의 과정에서 출현하는 국가모델의 변환과 국가이익의 재조정이라는 과제 까지도 품어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중견국의 국가이익론은 종전의 협소한 국가이익론을 넘어서는 데 필요한 개념적 틀을 제공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이 제시한 것은 열린 국가이익론이다.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열린 국가이익은 종전보다 좀 더 '부드럽게'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열린 국가이익은 기본적으로 상대 국가와 중첩되거나 공유할 수 있는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뜻한다. 더 나아가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목표라는 측면에서 열린 국가이익은 규범적이고 도덕적으로 타당하며 보편적 규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이렇게 네트워크 시각에서 보는 중견국의 국가이익론은 안팎으로 네트워크화 되는 국가모델로서 새로운 통일국가 모델에 대한 논의와 연결된다.

정리하자면, 이 글은 실천적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깔고 중장기 외교안보 전략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펼쳤다. 앞서 언급한 이론적 요소들, 즉 구조적 위치를 잡는 과정에서 창출되는 위치권력과 중개권력, 중견국의 네트워크 권력전략, 중견국의 열린 국익론과 국가모델 등의 적용 및 활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점은, 향후 30년을 염두에 두고 개발해야 할 한국의 중장기 외교안보 전략론은 기존처럼 강대국의 방침을 추수하는 '약소국 전략'과는 다른 '중견국 전략'이라는 새로운 개념적 범주를 설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한국의 '중견국 전략'이 또 하나의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힘의 논리를 따르는 '강대국 전략'의 발상과 행태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다

시 말해, 이제는 강대국을 추수하는 약소국 전략의 발상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은 맞는데 이것이 또 다른 강대국이 되겠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현시점에서 한국이 지향하는 중견국의 꿈은 적어도 언젠가는 또 다른 강대국이 되어서 한국이 정점에 올라서는 위계질서를 만들겠다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비유컨대 패권을 추구하기 위해서 혼자서 거미줄을 치는 '거미의 꿈'이 아니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나라들이 함께 어울려서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꿀벌의 꿈'을 가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상배. 2014. 『아라크네의 국제정치학: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도전』. 과주: 한울.
- 김상배. 2015. “사이버공간과 한반도 통일: 복합지정학으로 본 사이버안보의 세계정치.” 통일의 신지정학 제3차 토론회 발표문. 6월 5일.
- 김상배 편. 2014. 『네트워크 시대의 외교안보: 중견국의 시각』. 서울: 사회평론.
- 김상배 편. 2015. 『제3세대 중견국 외교론: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 서울: 사회평론.
- 김상배·이승주·배영자 편. 2013. 『중견국의 공공외교』. 서울: 사회평론.
- 손열 편. 2007. 『매력으로 엮는 동아시아: 지역성의 창조와 서울 컨센서스』. 서울: 지식마당.
- 전재성. 2012. “동아시아의 복합네트워크 규범론과 한국 전략의 규범적 기초.” 하영선·김상배. 편. 2012. 『복합세계정치론: 전략과 원리, 그리고 새로운 질서』. 과주: 한울. pp. 310-340.
- 지상현, 콜린 프린트. 2009. “지정학의 재발견과 비판적 재구성.” 『공간과 사회』 통권 1호, pp. 160-199.
- 평화포럼21 편. 2005. 『매력국가 만들기: 소프트파워의 미래전략』. 21세기평화재단·평화연구소.
- 하영선·김상배 편. 2006. 『네트워크 지식국가: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 서울: 을유문화사.
- Burt, Ronald S. 1992. *Structural Holes: The Social Structure of Competi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oddard, Stacie E. 2009. “Brokering Change: Networks and Entrepreneurs in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Theory*. 1(2), pp.249-281.
- Hafner-Burton, Emilie M., Miles Kahler, and Alexander H. Montgomery. 2009. “Network Analysis for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63, pp. 559-592.
- Ikenberry, G John. 2014. “The Illusion of Geopolitics: The Enduring Power of the Liberal Order.” *Foreign Affairs*, 93(3), pp. 80-90.
- Kahler, Miles. ed. 2009. *Networked Politics: Agency, Power, and Governance*.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 Kim, Sang Bae. 2014a. “Roles of Middle Power in East Asia: A Korean Perspective.” EAI MPDI Working Paper No.2.
- Kim, Sang Bae. 2014b. “The Inter-network Politics of Cyber Security and Middle Power Diplomacy: A Korean Perspective.” EAI MPDI Working Paper No.4.
- Maoz, Zeev. 2010. *Networks of Nations: The Evolution, Structure and Impact of International Networks, 1816-2001*.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ead, Walter Russell. 2014. “The Return of Geopolitics: The Revenge of the Revisionist Powers.” *Foreign Affairs*, 93(3), pp. 69-79.
- Nexon, Daniel, 2009. *The Struggle for Power in Early Modern Europe: Religious Conflict, Dynamic Empires, and International Chan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Nye, Joseph S. 2004.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 Nye, Joseph S. 2008. *The Powers to Lead*.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ratt, Cranford. ed. 1990. *Middle Power Internationalism: The North-South Dimension*. Kingston and Montreal: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Putnam, Robert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Wallerstein, Immanuel. 1974. "The Rise and Future Demise of the World Capitalist System: Concepts for Comparative Analysis."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16(4), pp. 387–415.

Waltz, Kenneth N.,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Random House.

# 유엔 안보외교의 미래전략<sup>1</sup>

제2장

이신화

## I. 서론

20세기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치루면서 집단안전보장 혹은 집단안보라는 제도가 군사안보의 새로운 접근으로 등장하였다. 즉 일국의 군사력 확대나 타국과의 동맹을 통해 국가안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지구촌 국가

1 본고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및 부결안, 기권 등의 집계'와 관련한 자료는 유엔 웹사이트 정보 및 필자가 유엔자료를 통해 직접 구분한 목록에 따라 조사한 것으로, 이 연구 부분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2014S1A3A2044032)을 받아 수행되었다.